

경제

광주 경제 '투톱' 노동관계법 협상 주목

기아차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안된다" ... 경총 탈퇴 강수

'무노조' 삼성전자 "복수노조 허용엔 노조 생길라" 걱정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에 광주 경제의 쟁두마치인 기아차 광주공장과 삼성광주전자의 시선이 쏠려 있다. 내년 1월부터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의 시행을 앞두고 노사정이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현대기아차그룹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탈퇴를 선언하는 등 체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총협회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경총이 주장하는 대로 종업원 1만명 이상 또는 5천명 이상 사업장 입장만 먼저 시행한다면 이들 사업장은 노조의 타깃이 돼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선상대적으론 노조 노조가 새로 생길 것으로 기대해 내년부터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해하다. 우선, 복수노조 허용 여부 문제와 관련, 강성 위주의 기존 노사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면 점에서 기대가 크다. 광주공장만 보더라도 19년 동안 쉬지 않고 파업을 되풀이하면서 지난 2000년부터 매출 손실 규모만 1조원을 육박한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도 민감한 이슈다. 현대차의 노조전임자 모두 217명으로, 금속노조, 민주노총 파견임시 상근자 수가 포함돼 있다. 기아차도 144명에 이른다. 기아차 광주공장도 26명이나 된다. 현대차는 이들 노조 전임자에게 연간 137억원, 기아차는 87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임자 1인 대비 6천만~6천600만원 꼴이다.

삼성광주전자의 경우 노조가 활성화돼 있지 않은 만큼 구체적 입장 표명이나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삼성 그룹의 입장과 같은 분위기는 게 지역 경제에 시적이다. 삼성그룹은 최근 이인용 부사장이 "우리도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노사관계가 비타협적이고 투쟁적인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결국 삼성광주전자도 새로운 노조 등장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에서, 강성 노조가 생길 경우 정상적 경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복수노조 허용 문제에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



영암 '매력한우' 상무점 오픈

영암의 명품 소고기 브랜드인 '매력한우'가 4일 광주 상무지구 상무점(사진)을 오픈한다. 매력한우 상무점은 광주에서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조선의 땅' 옆에 200여평 규모로 문을 연다. 매력한우 상무점은 매력한우의 광주 직관장으로, 5번째 매장이자다. 매력한우는 지난해 영암군 영암읍에 1호점을 낸 후 최고의 품질을 바탕으로 전남의 대표적 명품 소고기 브랜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기부금 영수증 허위 발급 개인·단체도 가산세 부과

앞으로 법인으로 부터 기부금을 받은 뒤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했을 때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대상이 법인에서 개인과 단체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의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물고 있다"며 "이를 단체와 개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법인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 중에 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이나 단체 명의로 운영되는 곳이 가산세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또 개인이나 단체 명의로 운영되는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전문예술단체 중 법인이 아닌 곳도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발급내역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가산세율은 허위 영수증 발급시 허위 발급한 금액의 2%,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미작성, 미보관한 금액의 0.2%다. 정부가 가산세 적용대상을 확대해 한 것은 개인이 내는 기부금의 경우 허위 영수증 발급시 법인, 단체, 개인을 불문하고 가산세를 물리지만 법인이 내는 기부금의 경우 비영리법인에만 국한돼 있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기부대상 기관으로부터 실제 기부금보다 많은 액수의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기부금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불법적 관행을 고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지난해에는 모 종교기관에 저 적은 돈을 주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양해종 3천880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거나 포탈액을 자진 납부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코스피지수 나흘째 상승 3일 코스피지수가 나흘째 상승하며 전날보다 23.37포인트 오른 1,615.00으로 장을 마쳤다. 나흘 만에 상승한 원·달러 환율은 전날 보다 1.30원 오름 1,155.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강남 집값 올라야 광주 집값도 뜬다

금융권 최근 10년 분석 광역시의 집값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남 집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광복 집값이 6대 광역시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상 큰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장민·이규복·임형준 연구위원은 3일 '최근의 부동산시장 상황과 향후 금융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2000년 이후 약 10년 동안의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통계 지표를 분석한 결과 강남 집값은 수도권(고양·성남·수원), 광복, 6대 광역시의 집값에 모두 영향을 줬다. 수도권 집값의 경우 광복과 6대 광역시의 집값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집값이 6대 광역시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상 큰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보고서는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이 수도권 도시 지역 집값을 끌어올렸으며, 강남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은 다시 광복과 지방 주요도시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이는 서울 강남을 포함한 전국의 공통된 현상이었다. 집값 상승은 다른 자산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159.4% 상승한 사이 주가지수와 콜프회원권 가격(에이스콜프회원권 거래소 산출)은 74.2%와 268.8%씩 올랐다. 이들 3가지 자산 가격이 영향을 주고받는 순서는 아파트→주식→콜프회원권 순이며, 역순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과거 사례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당국의 금융규제 정책이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단기적이고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금융규제 정책은 2003년 5월과 2006년 11월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둔화시키는 등 집값 안정에 기여한 반면, 2005년 6월과 2006년 3월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KB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강정원씨 내정

강정원 국민은행 차기 회장에 내정됐다. KB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내정된 강정원(사진)은 3일 서울 명동 본사에서 단독 후보인 강 행장의 면접 등을 거쳐 찬반 투표를 한 결과 9명의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강 행장을 차기 K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으로 이사회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회장 후보로 밝힌 강 행장은 오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지내 경영능력이 검증됐으며 면접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비전을 제시해 앞으로 3년을 이끌 KB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추천됐다고 회추위는 설명했다.

Market summary box showing KOSPI index at 1,615.00 (+23.37), KOSDAQ at 480.52 (+4.55), and other market data.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에셋코리아' (Asset Korea)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details like location, price, and featur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수완아울렛 분양사/업/설/명/회' (Suwan Outlet) featuring property listings and contact information.